



# 최근 일본의 인구 및 사회보장 관련 문제

-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사라진 기업연금 -

김명중 (일본 닛세이치초연구소 연구원)

## ■ 머리말

2012년에 들어와 일본에서는 인구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장래인구추계의 공표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연금의 소실과 관련된 사건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구 및 사회보장 관련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 1월 30일 국제조사를 참고로 하여 추계작업을 실시한 일본의 장래인구추계를 5년 만에 공표하였다. 공표결과에 의하면, 향후 50년 동안 일본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피라미드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동력 확보 및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인구감소에 의한 현역세대의 감소와 그로 인한 사회보험료의 재원 확보의 어려움은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일본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기업연금 자산 등을 운용하는 운용회사가 수익률을 허위로 보고하고, 위탁받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의 인구 및 사회보장 관련 이슈로서 1월에 공표된 장래인구추계의 주요 결과와 2월에 발생한 기업연금 소실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 인구추계 결과의 개요

2012년 1월 말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의해 공표된 일본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 2,806만 명으로 5년 전 조사시점인 2005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지만, 최근의 인구감소 현상은 2010년 이후 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포함하여 일본에 상주하고 있는 총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장래인구추계는 5년마다 공표되며, 이번 추계에서는 2010년까지의 실적치를 참고로 하여 2060년까지의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각각 고위, 중위, 저위의 세 가지 가정을 하여 총 아홉 가지 추계작업을 실시하였다. 공표된 추계 결과는 연금 급부 및 보험료 수입, 그리고 저출산 대책 관련 비용, 의료비 전망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계산에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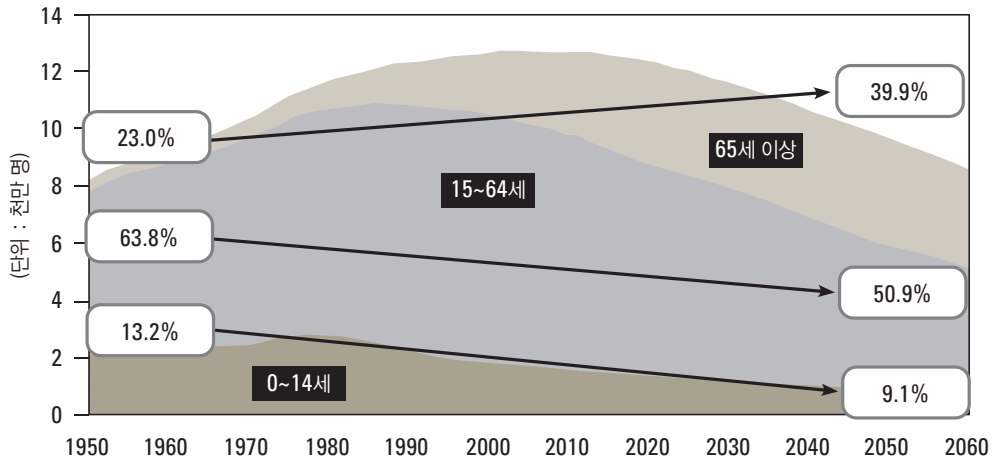
### 유소년인구(0~14세)의 감소

인구추계의 출발점인 2010년에 1억 2,806만 명이던 일본의 총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1억 1,162만 명, 2040년에는 9,913만 명, 더욱이 2060년에는 8,674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50년 동안 현재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132만 명이 줄어든다는 예상인데, 이는 도쿄를 포함한 현 관동지역<sup>1)</sup>의 인구에 상당하는 수치이다.

출생아 수는 1973년의 209만 명에서 2010년에는 107만 명까지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유소년인구(0~14세)도 1980년대 초 2,700만 명 규모에서 2010년에는 1,684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중위추계 결과에 의하면 2015년의 유소년인구는 1,500만 명대로 감소한 이후, 2060년에는 2010년의 3분의 1 수준인 56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은 연령계층별 인구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0년에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2%였던 유소년인구는 2060년에는 9.1%까지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의 65세 이상 고령자인구는 23.0%

1) 2010년 현재 관동지역의 인구 4,261만 명: 도쿄도 1,316만 명, 가나가와현 905만 명, 지바현 622만 명, 사이타마현 719만 명, 이바라키현 297만 명, 도치기현 201만 명, 군마현 201만 명.

[그림 1] 연령계층별 인구 추이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를 이용해 필자 작성.

에서 39.9%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

전후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995년에 8,716만 명으로 피크를 맞이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8,173만 명(생산연령인구 비율 63.8%)까지 감소하였다.

더욱이 중위추계 결과에 의한 장래 생산연령인구는 2103년, 2027년, 2051년에 각각 8,000만 명, 7,000만 명, 5,000만 명을 밑돌아 2060년에는 4,418만 명(생산연령인구 비율 50.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그림1 참조).<sup>2)</sup>

일본의 전체인구는 2010년부터 2060년 사이에 4,132만 명이 감소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 생산연령인구가 3,755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지금까지 일본사회에서는 출생률

2) 고위추계: 2060년 4,909만 명, 저위추계: 2060년 3,971만 명.

의 감소와 고령자의 증가라고 하는 저출산·고령화가 주된 논제였었는데, 향후에는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보다 중요한 논제로서 논의될 것으로 고려된다.

생산연령인구는 생산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제약되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 여성, 외국인근로자 등이 노동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와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는 정책이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비수요의 축소도 걱정거리다. 내수의 감소로 인해 기업은 점점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게 되고 이에 따른 공동화 현상은 경제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엔고현상이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생산연령인구 중 상당수는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받고, 또한 세금과 사회보험과 관련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확률이 높다.

후생연금<sup>3)</sup>의 2011년도 적립금 잔고는 약 141조 엔으로, 이는 2004년 연금개혁 시에 상정한 금액보다 약 15조 엔 감소한 금액이다. 이처럼 적립금이 감소한 이유로는, 임금수준 저하로 인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 점과, 물가나 임금수준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급부를 감액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보험료 수입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연금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부가방식, 즉 현역세대가 보험료를 내고 고령자세대가 급부를 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가방식의 경우 출생률이 높고 현역세대의 비율이 높은 피라미드형이 유지될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고 현역세대의 비율이 낮은 방추형의 경우에는 현역세대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현역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의 하나로 연금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보험료의 이중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이행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용자가 가입하는 소득비례연금.

## 노년(65세 이상)인구 및 구성비의 추이

2010년 현재 2,984만 명인 노년(65세 이상)인구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sup>4</sup>가 65세 이상이 되기 시작하는 2012년에 3,000만 명을 넘어서고, 제2차 베이비붐 세대<sup>5</sup>가 65세 이상이 되기 시작하는 2042년에 3,878만 명으로 피크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년인구 비율은 2010년 현재의 23.0%에서 2060년에는 3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인구 2.5명 중에 1명이 노년인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합계출산율과 평균수명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0년의 1.39에서 2024년에는 1.33까지 저하했다가 점차 회복되어 2060년에는 1.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출산율의 회복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2006년의 추계치(2055년에 1.26)보다 상향 수정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인 2.07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현재 일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79.64세, 여성이 86.39세로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만 명 가까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의 평균수명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지만, 향후에는 다시 증가하여 2060년에는 남성이 84.19세, 여성이 90.93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일본의 인구피라미드는 과거의 신생아 수의 급속한 증가와 감소, 예를 들면 1945~1946년 종전에 의한 신생아 수의 감소, 1947~1949년: 제1차 베이비붐 세대에 의한 신생아 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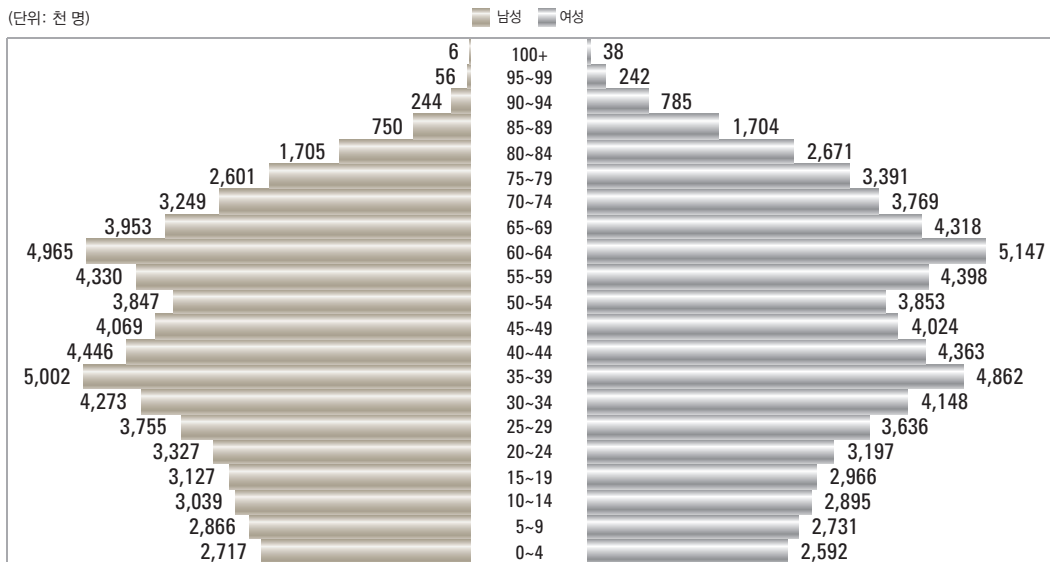
4)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5) 1971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1950~1957년: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에 따른 신생아 수의 감소, 1971~1974년: 제2차 베이비붐 세대에 의한 신생아 수의 증가, 1975년 이후: 신생아 수의 감소 등에 의해 들쭉날쭉한 인구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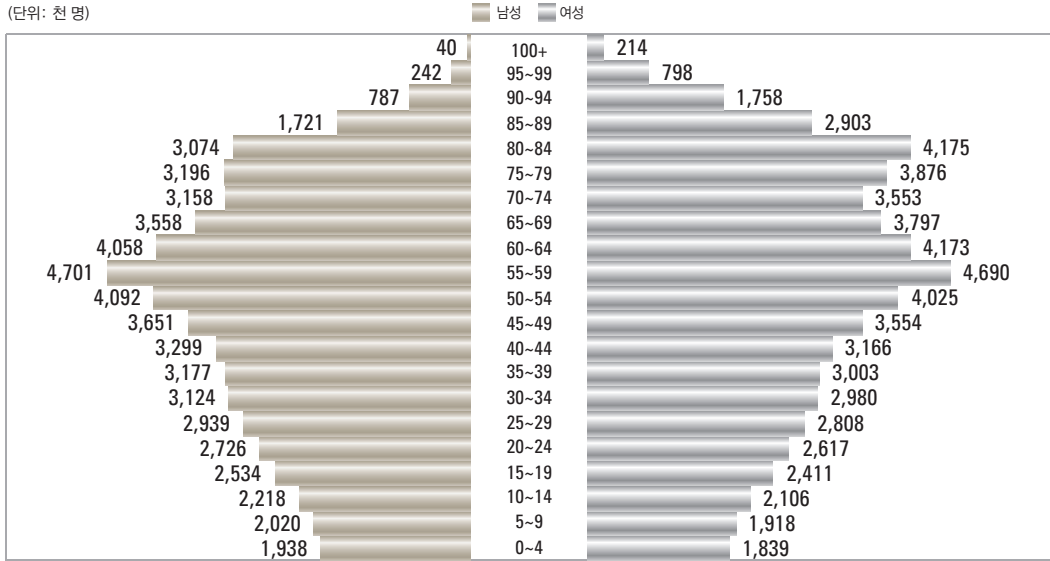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대 전반,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30대 후반에 해당하는 2010년의 인구피라미드(그림 2 참조)는 장래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변화가 예상된다. 즉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80대 전반,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50대 후반에 해당되는 2030년에는 연소인구 및 젊은 층이 차지하는 면적이 2010년보다 줄어드는 반면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2010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3 참조). 더욱이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80대 후반 이상이 되는 2060년에는 90대 이상의 연령계층을 제외한 전체연령계층의 면적이 줄어드는 등 인구감소의 영향이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참조).

[그림 2] 2010년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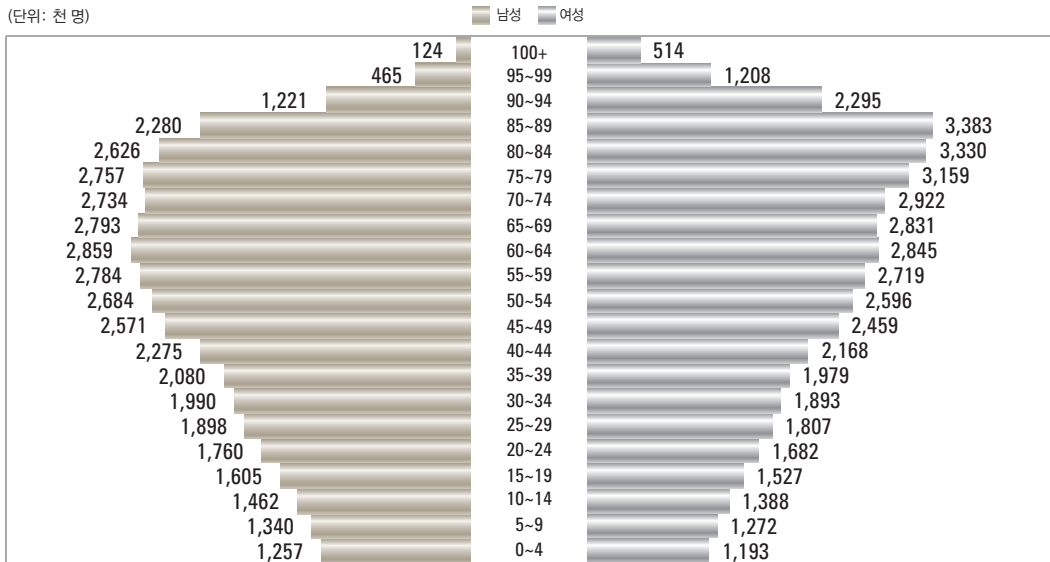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를 이용해 필자 작성.

[그림 3] 2030년 인구피라미드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를 이용해 필자 작성.

[그림 4] 2060년 인구피라미드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를 이용해 필자 작성.

## ■ 사라진 기업연금

### AIJ투자고문이 자산 운용 수익률을 은폐, 위탁자산의 대부분이 소실

기업연금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고문회사 AIJ투자고문(이하 AIJ)<sup>6)</sup>이 위탁자산의 대부분을 소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산 운용 수익률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고객에게 보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일본 금융청은 지난 2월 24일 금융상품거래법위반 혐의로 AIJ투자고문에 1개월의 업무정지명령과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AIJ에 운용을 위탁한 기업연금기금은 2011년 3월 말 현재 84개 기금으로 수급자 수는 34만 4,299명, 현역세대의 가입자 수는 53만 9,6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IJ에 운용을 위탁한 위탁자산은 총 1,852억 6,500만 엔으로, 이는 84개 기업연금의 자산총액(1조 9,109억 7,300만 엔)의 약 9.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고객의 대부분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복수의 중소기업자 연합에 의해 조직된 ‘종합형’ 후생연금기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AIJ에 자산을 위탁한 기업연금기금 84개 기금 중에서 중소기업 등에서 만든 후생연금기금은 74개에 이르렀고, 지역별로는 홋카이도, 동북지역, 관동지역이 5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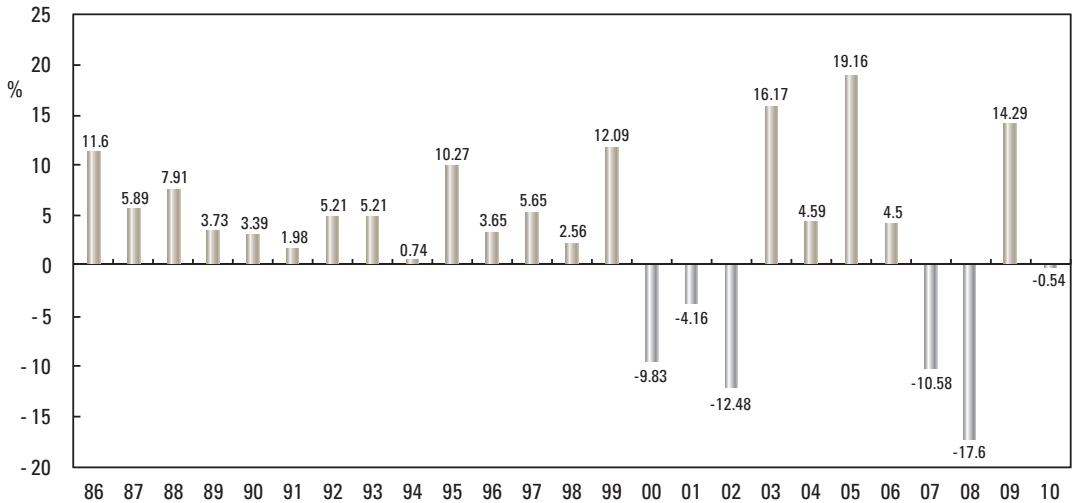
AIJ는, “금융과생상품의 운용에 의해 시장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리스크를 줄여 절대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등 운용실적도 호조인 것처럼 투자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올 1월 하순부터 AIJ를 조사한 결과, 예탁된 운용자산은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잔고는 약 200억 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IJ가 판매한 금융상품 ‘에임 밀레니엄 펀드’의 자료에는 2002년 5월 운용개시 이후 115개월간 누계 247%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리먼 쇼크가 있었던 2008년에도 7.45%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기록하는 등 허위정보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후

6) 1989년에 설립, 자본금 2억 3,000만 엔.



[그림 5] 후생연금기금의 자산운용률의 추이



자료 : 기업연금연합회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로 필자 작성.

생연금기금의 전체 자산 운용 수익률은 그림 5를 참조).

금융청은 이번 AIJ의 기업연금 소실문제와 관련지어 기업연금 등을 운용하고 있는 투자고문회사 265사에 대해서 자산의 운용내용과 리스크 관리상황 등에 대해 오는 3월 14일까지 금융청에 보고하도록 명령을 전달하였다. 즉 일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AIJ의 사례처럼 사실을 은폐하고 영성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를 적발할 방침이다.

## 후생연금기금이란

1966년에 만들어진 후생연금기금은 원래는 정부가 운영하던 후생연금의 일부를 기금이 대행해서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보다 높은 이윤으로 운용하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경기가 좋았던 때에는 높은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연합하여 ‘종합형’ 후생연금기금을 설립하는 등 피크 시에는 기금 수가 무려 1,883개에 달하였다.

하지만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대부분의 기금이 정부와 약속했던 자산운용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모체기업은 부족분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관리하는 단독형 기금의 대부분은 장래 후생연금급부에 필요한 대행부분 관련 자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대행부분 반환조치’를 실시하였고, 독자적인 각출금만을 운영하는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금을 단독으로 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형’ 후생연금기금의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대행부분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2010년도 말 현재 총 595개 후생연금기금 중에서 약 8월에 해당하는 495개 기금은 ‘종합형’으로, 후생연금기금제도에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중소기업의 기금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연금의 예정이율(자산 운용 수익률)은 1997년에 탄력운용을 허가할 때까지 5.5%였는데,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2~3%까지 낮아진 경우도 많다. 단, 예정이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약속한 연금 급부에 맞춰 적립금을 늘리든가, 연금 급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복수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형 후생연금기금의 경우, 연금 급부에 대한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2009년도 말까지 약 9할의 기금이 예정이율을 5.5%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후생연금기금만 남게 되고, 이러한 기금 등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운용회사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생연금기금은 트럭이나 택시 등 중소기업이 모여서 만든 종합형이라고 불리는 기금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금의 모체기업은 연금 급부에 필요한 적립금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후생연금기금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급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종업원의 임금도 인상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또한 급부를 감액하는 것도 기존 OB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현하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이 후생연금기금 개혁을 위한 작업부회를 개최

AIJ에 의한 기업연금 소실문제를 포함하여 후생연금기금의 제도개혁을 위해 민주당은 지난

7월 후생연금기금에 관한 제도개선책을 검토하는 작업부회의 첫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작업부회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독 및 규제를 강화

AIJ는 오랫동안 운용실태와는 전혀 다른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연금 자금을 모아 왔지만, 금융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작업부회는 향후 투자고문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투자고문회사가 연 1회 금융청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정보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게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투자처의 헤지펀드에 대한 수익률 등 연금자금의 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운용과 기업통치에 대한 외부감사의 유무 등을 개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AIJ처럼 고객으로부터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투자고문회사는 260사 이상이 되는데, 보다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익률이 부적절하게 높은 케이스 등을 한눈에 파악하게 되면 당국의 부정에 대한 체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고문회사의 검사체제 강화를 위해 금융청은 증권감시위원회의 증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단, 정부는 소비세 증세와 동반한 행정개혁으로 국가공무원의 삭감 방침을 내걸고 있어 조사인원 확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기금의 재정대책

AIJ에 운용을 맡긴 대부분의 후생연금기금은 장래의 연금 급부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모체기업에 의한 부족분의 지원이나 보험료 인상 등도 어려운 상태로 높은 자산 운용 수익률을 제시한 AIJ에 운용을 위탁한 것도 적립금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전체 후생연금기금의 7할 이상인 445개 후생연금기금이 적립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13개 기금은 공적연금의 일부를 정부를 대신해 운용하는 대행부분의 급부에 필요한 적립금도 부족한 상태이다. 3년 연속해서 적립금이 필요한 금액의 9할을 밀들거나, 1년이라도 필요금액의 8할을 밀들면 재정위기로 간주되는 '지정기금'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81개 기금이 지정기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AIJ의 기업연금 손실 문제로 인

해 52개 기금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정기금은 100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업부회는 가입자에게 약속한 자산 운용률을 인하하거나, 연금 급부의 감액을 보다 쉽게 하는 등 기금의 재정개선을 위한 제도개정을 검토할 방향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의 개혁안의 핵심은 연금 급부 감액의 조건을 완화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금 감액에 대한 후생연금의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적립금이 일정 수준을 밑도는 지정기금이 대상으로, 후생연금기금의 재정악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운용체제의 개선

또한 연금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위탁처가 특정 투자고문 등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산투자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총 투자의 3할 이상의 집중 투자를 금지하는 안을 핵심으로 검토를 진행할 전망이다. 더욱이 연금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신탁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 외에 투자고문의 규제 방향도 수정할 방침이다.

AIJ의 기업연금 소실문제에서 지적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후생연금기금의 운용담당자의 대부분이 충분한 금융지식이 없는 구 사회보험청으로부터의 낙하산인사에 의해 임명된 자와 업체단체 출신자라는 점이다. AIJ의 기업연금 소실문제와 관련된 조사에 의하면 구 사회보험청의 간부 23명이 후생연금기금에 재취직하였으며, AIJ는 이들 사회보험청 OB들의 네트워크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미야마 후생노동대신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 최근 그 실태가 판명되었다.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한 일본사회보험청 OB로 구성된 친목회의 내부자료(2005년 12월)에 의하면 2005년 시점에 전국의 687개 후생연금기금 중 500개 후생연금기금에 600명 이상이 낙하산인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산이 일정금액을 넘는 후생연금기금에는 운용 전문가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7) 마이니치신문 2012년 3월 5일자 석간, 「企業年金消失:旧社保庁OB600人, 500厚生年金基金に天下り7割り, 運用責任者--05年」.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후생노동성이 관할하고 있는 후생연금기금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 당내에서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관할하는 금융청과 공동으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 맺음말

본고에서는 최근 발표된 일본의 장래인구추계의 개요와 최근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연금 소실문제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향후 일본의 전체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었는데,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의 저하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이 저하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20~30대 남녀의 미혼화와 만혼화, 여성의 학력상승과 이로 인한 여성의 기회비용 상승, 노동력의 비정규화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출산율 저하에 대해 일본정부는 보육소 증설에 의한 대기아동문제의 해소, 아동수당의 조정 등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일본정부의 대책이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일본 상지대학의 기토 히로시 교수는 현재 일본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대책은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많은데, 이보다는 미혼화와 만혼화의 증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결혼하지 못한 남녀의 결혼을 서포트하는 직업훈련제도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sup>8)</sup>

본문에서 다룬 또 하나의 테마인 기업연금 소실문제가 일본사회에 미친 파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의 감소로 연금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자산 운용회사의 수익률 은폐 등에 의한 연금자산의 소실은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젊은 층의 연금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연금자산의 소실이라는 더블 펀치를 맞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향후 대책과 움직임이 주목되는 바이다. **KLI**

8) 上智大 鬼頭 宏(기토 히로시) 교수, 일본경제신문 2012년 2월 27일, 「人口減少経済:①出生率低迷続く」.